

靑, 이미선·문형배 청문보고서 재요청

“주석 의혹 대부분 해명”... 문대통령 19일 임명 의사

한국당·바른미래 반발... 여야 대치에 4월 국회 ‘빈손’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석보유 의혹을 앞세워 사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전임 재판관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헌법재판소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18일을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송부)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8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

으면, 문 대통령은 19일 임명안을 재가하고 발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 재판관들의 임기는 19일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기한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19일에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부터 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하는 만큼 19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석보유 관련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고, 결정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은) 국회에 대한 청와대(發) ‘항복 요구서’라며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 지명을 거둬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자리라”(한국당의 고발로) 언제든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모셔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날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광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응답이 과반이었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가

국민 여론을 무시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면 임명을 강행해선 안 된다”며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관철시키는 정면돌파 카드를 꺼낸 것은 ‘고위 공직자 인사 실패’로 더 이상 야당에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기 개각 장관 후보자 두 명이 낙마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마저 임명이 철회된다면 국정 장악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서여야 간 대치 정국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추경경정예산 편성 및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현역 출마시 ‘경선 공천’ 원칙

총선 공천 룰 확정 ... 정치신인에 10% 가산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년 총선에 현역 의원이 출마하는 경우 전원 당내 경선을 거처도록 하는 내용의 공천 기준을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기획단 간사인 강홍식 의원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기획단은 가산·감산 기준을 전체적으로 정비했다. 공천 심사와 경선 단계에서 서류 점수와 경선 득표에 각각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비율을 정한 것이다. 우선 공천 심사 단계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치신인은 과거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으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사람 등도 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

여성·청년 등에 대한 가산 규정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공천 심사와 경선 단계에선 선출직 공직에서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산을 중점 10%에서 20%로 대폭 강화했다. 또한 경선 단계에선 경선 결과에

불복한 적이 있거나 탈당한 적이 있는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징계나 제명을 당한 적이 있는 경우도 감산을 20%에서 25%로 강화했다.

당규상 탈당 경력자는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사람이 의미한다. 청와대 비서실 근무 등 직업상의 이유로 당을 떠나있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당원 자격이 정지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20%에서 15%로 감산을 완화했다. 가산점이 중복되면 큰 가산점만 적용되고 감산도 마찬가지로이다.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되 권리당원 50%와 불특정 다수(안심번호 응답자) 50%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으로 하고, 안심번호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확보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 특별당규 형식으로 내년 총선 공천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고, 전당원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조국 ‘총선 차출론’ “세월호 징글징글” 한국당 막말 후폭풍

민주부산시당 “PK 이끌어야”

여권 내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총선 차출론’이 번지고 있다. 21대 총선 최대 승부처인 부산·경남(PK)에 ‘최대어’ 조 수석을 투입해 승기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광역단체장을 싹쓸이하는 대승을 거뒀지만, 최근 민심 흐름은 좋지 않아 고민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 수석이 고향인 부산에 출마하면 PK는 물론, 전체 총선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조 수석이 PK가 아닌 민주당의 또 다른 ‘협자’인 서울 강남지역에 출마하는 것도 파급력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 ‘희망’ 정도로 언급되던 조 수석 차출론을 공식화한 것은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이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인재영입 가이드라인을 부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했다. 이 기준에 맞는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 수석”이라며 “공식 비공식적으로 청와대에 당 지도부에 이런 뜻을 전달하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선거는 ‘차출’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면 하는 것”이라며 “저도 정치를 오래 했지만 ‘차출’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고 본인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당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열린 5주기 추모식에서 헌화 및 분향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인천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도부, 국민 공분에 진화 나서... 차명진·정진석 윤리위 회부

자유한국당이 16일 세월호 유족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에 휩싸인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들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에 회부한 것이다.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관련 징계가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5주기 당일 유족들을 향한 막말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을 의식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두 전현직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당 전체로 향하기 전에 신속히 진화에 나서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두 전현직 의원 발언

의 부적절성을 심각하게 고려해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었다. 차 전 의원은 전날 오후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짬 짜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써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차 전 의원은 “머리 숙여 용서를 받다”며 사과했고, 정 의원은 기자회견과 만나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달라”는 뜻에서 (징글징글 하다는) 얘기가 나온 것”



차명진

정진석

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들 전·현 의원, 나아가 한국당을 향한 비난 여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는 김순례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의 5·18 망언에 대한 당 윤리위의 징계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세월호 막말’이 터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당 지지에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파국 치닫는 ‘바른미래’

“연명치료 그만” vs “당 무력화 말라”... 원내대책회의 충돌

내일 의총 분수령

4·3 보궐선거 책임 공방으로 불거진 바른미래당 내홍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점차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순환규 대표가 ‘조건부 사퇴’ 카드로 배수진을 치고 나섰지만, 바른정당계 최고위원들(하태경·권은하·이준석)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 대표의 ‘즉각 사퇴’를 주장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당 공식 석상에서도 손 대표의 퇴진을 놓고 공개 살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임재훈 의원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고위원회의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 3명을 겨냥해 “최고위의 무력화가 더 길어지면 누구에게도 득이 안 된다”며 “손 대표도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성찰의 시간을 보냈고, 거취 문제와 관련해 가시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세 최고위원이 결단을 통해 최고위에 복귀하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하 최고위원은 즉각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죽어가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가 아니다”라며 “당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당을 살리기 위해 절절하

게 호소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하 최고위원은 이번 주 안으로 전국 지역위원장들에게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연명장을 돌리는 등 손 대표의 퇴진을 강하게 압박할 방침이다. 동시에 안철수 전 의원의 조기 복귀도 거론했다. 하 최고위원은 “바른정당계 인사들의 뜻은 모였고 이제 국민의당 출신 지역위원장의 뜻만 확인하면 연명장을 돌릴 것”이라며 “총 100여명의 지역위원장 가운데 50~60명의 뜻만 모아도 손 대표는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사태의 본질은 올드보이 리더십의 파산이라는 점”이라며 “독일에 가서 안철수 전 의원을 만나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일단 내부 상황이 정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운천 의원의 탈당 후 자유한국당 부당살처제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원론적 이야기만 했을 뿐 심사숙고 중”이라고 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지도부는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의 현안을 논의하기로 해 손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이번 주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1686,50㎡(510평) 건물:3,000,80㎡(907,74평)
지상2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 (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55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136,20㎡(41,20평) 건물:265,58㎡(80,3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15억 문화전당역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하남동 (준주거지역)
토지:979,70㎡(296,36평) 건물:1928,89㎡(583,49평)
지상4층 매매가:65억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434,44㎡(131,4평) 건물: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55억 이마트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5700㎡(1700평) 건물:6500㎡(1900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130억
건물2동, 신법적용 350베드 가능 요양원 40베드 별도, 주차장넓음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토지:5,385㎡(1629평) 매매가:60억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분할가능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상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64억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15,953㎡(4825평) 매매가:12억1천만 자연취락지구, 10m도로접
- ★ [토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경매

- ★ [다가구(원룸)]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364㎡(110,1평) 건물:566,11(171,2평) 감평가18억1천7백만원 최저가 5억7천2백만원
- ★ [공장용지]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대지:11065,1㎡(3347,2평) 감평가 24억7천8백만원 최저가 (70%) 17억3천5백만원
- ★ [근린주택] 영광군 법성면 토지:708㎡(214,2평) 건물:266,61㎡(80,6평) 감평가 5억2천8백만원 최저가 (70%) 3억7천만원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대지 25351㎡(7668,7평)전원주택단지적합 감평가 27억1천2백255만원 최저가(70%)18억9천8백79만원

- ★ [의료시설]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대지:11139㎡(3369,5평) 건물:5530,56㎡(1612,5평) 감평가 40억3천5백만원 최저가(70%) 28억2천4백만원
- ★ [양계장] 함평군 월야면 양정리 대지:136695,78㎡(41350,5평) 건물:24737,02㎡(7482,9평) 감평가 62억7천2백만원 최저가(70%) 43억9천만원
- ★ [숙박시설] 광산구 우산동 대지:627,8㎡(189,9평) 건물:2122,01㎡(641,9평) 감평가 35억7천만원 최저가 25억
- ★ [주유소] 서구 농성동 토지 8131,8㎡(246,174평) 건물 320,23㎡(278,37평) 감평가 15억5천만원 최저가 15억5천만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